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
목 칠

■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

Executive Summary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i
1. 조사 개요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
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
   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
   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4
   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6
   ④ 대북정책 평가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8
   ⑤ 북한의 대외관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0

□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총괄 : 이봉형 이사 대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□ 통일연구센터 : 이혜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   이응화 연구위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
■ 조사 개요
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. 이에 현대 경제연구원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고자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통일·외교·안보 분야의 전문가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■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
(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) 전문가의 85.9%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.

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) 전문가의 73.9%는 평창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.

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한 방식) 보수는 ‘다자대화’(46.2%)를 통한 관계 개선을, 진보는 ‘남북 정상회담’(34.4%)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.

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) 전문가의 56.5%(매우 좋아질 6.5%+다소 좋아질 50.0%)가 ‘좋아질 것’으로 전망했다.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, ‘북한 내부의 필요성’(44.2%)과 ‘우리정부의 대북정책’(42.3%)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.

<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평가 >  <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>
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
(북한 핵·미사일 해법) 전문가의 59.8%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‘대화제재 강화’(34.6%)에, 진보는 ‘대화로 해결’(46.9%)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.
(북한의 도발 가능성) 7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57.6%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,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81.5%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. 한편,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(23.9%) 가능성을 낮지만, 사이버공격(67.4%)의 가능성을 높다고 응답했다.

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
(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) 전문가들은 '6자회담 재개'(76.1%), '금강산관광 재개'(62.0%), 개성공단 재가동(59.8%), '5.24조치 해제'(59.8%) 순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. 하지만 정치성향별로는, 5.24조치 해제(진보·중도 70%대 찬성, 보수 42.3% 반대),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(진보·중도 70~80%대 찬성, 보수 50% 반대)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이 나타났다.

(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)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, 조속한 재개노력(67.4%)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, '북한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'(17.4%), '남북관계 상황을 바가면서 개시해야 한다'(15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④ 대북정책 평가
(대북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75.0%(이주 절단의 절반 이상)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의 절반만 '잘한다'고 응답했다.
(신북방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64.1%( 크게 기여 7.6%+다소 기여 56.5%)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.
(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)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, 임기 3년 이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.8%에 달했다.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(96.9%), 중도(88.3%), 보수(65.4%) 순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. 남북정상회담 정상 시기는 임기 초반 46.2% 임기 3년 내 47.4%)가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.

⑤ 북한의 대외관계
(북미 정상회담 가능성) 전문가의 52.2%(매우 가능성 높음 2.2%+가능성 있음 50.0%)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.
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) 전문가의 절반 수준이 북미, 북중관계 모두 향상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
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

1. 조사 개요

●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고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

- 조사 시기: 2018년 1월 26일 ~ 2월 5일 (11일 간)

- 조사 방법: 설문지 조사

- 조사 대상: 연구원, 교수,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·외교·안보 전문가 92명

- 조사 내용: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,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, 이산가족상봉 재개 가능성,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,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등

- 표본 오차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±3.08%

<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>

<table>
<thead>
<tr>
<th>구분</th>
<th>주요 내용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</td>
<td>-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&lt;br&gt;-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&lt;br&gt;- 평창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&lt;br&gt;- 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</td>
</tr>
<tr>
<td>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</td>
<td>-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해법 모색&lt;br&gt;- 북한의 도발 가능성(핵 실험, 미사일 발사 등)</td>
</tr>
<tr>
<td>③ 남북관계 주요 현안</td>
<td>- 5.24조치, 개성공단, 금강산관광, 6자회담&lt;br&gt;-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</td>
</tr>
<tr>
<td>④ 대북정책 평가</td>
<td>-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&lt;br&gt;-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</td>
</tr>
<tr>
<td>⑤ 북한의 대외관계</td>
<td>-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 전망&lt;br&gt;-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▲ 현대경제연구원
2.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

①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

○ (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의) 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

- 전문가의 85.9%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
  · “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85.9%(매우 도움이 된다 45.7%+도움이 된다 40.2%)가 그렇다고 응답
  ·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(61.6%)에 비해 진보(100.0%)의 긍정적 평가 비중이 높음
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) 전문가의 73.9%는 평창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
- 전문가의 상당수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이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
  · “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73.9%(매우 적극적 9.8%+다소 적극적 64.1%)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  ·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의 다수(87.5%)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 반면, 보수(57.7%)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

＜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평가＞  ＜평창 이후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의지＞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한 방식) 보수는 다자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, 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

- “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지속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보수(46.2%)는 ‘양자 다자대화’를, 중도(35.3%)는 ‘남북 사회문화 교류’를, 진보는(34.4%) ‘남북 정상회담’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

<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지속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합한 접근 방식 >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</td>
<td>27.2%</td>
<td>26.9%</td>
<td>35.3%</td>
<td>18.8%</td>
</tr>
<tr>
<td>남북 양자 보다는 다자대화로 관계모색</td>
<td>27.2%</td>
<td>48.2%</td>
<td>14.7%</td>
<td>25.0%</td>
</tr>
<tr>
<td>남북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으로 확대</td>
<td>26.0%</td>
<td>15.4%</td>
<td>26.5%</td>
<td>34.4%</td>
</tr>
<tr>
<td>민간 경제협력 등 민간 교류를 매개로 확대</td>
<td>19.6%</td>
<td>11.5%</td>
<td>23.5%</td>
<td>21.9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) 전문가의 절반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고, 이는 ‘북한의 필요성’과 ‘우리정부의 대북정책’에 기인한다고 평가

- “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56.5%(매우 좋아있 6.5% + 다소 좋아있 50.0%)가 ‘좋아질 것’으로 전망
  - 다소로 ‘현 수준 유지’(23.9%), ‘나빠질 것’(19.6%) 순으로 응답되었고, 정치 성향별로는 ‘다소 좋아질 것’이라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

<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>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매우 좋아짐</td>
<td>6.5%</td>
<td>7.7%</td>
<td>5.9%</td>
<td>6.3%</td>
</tr>
<tr>
<td>다소 좋아짐</td>
<td>50.0%</td>
<td>34.6%</td>
<td>47.1%</td>
<td>65.6%</td>
</tr>
<tr>
<td>현수준 유지</td>
<td>23.9%</td>
<td>30.8%</td>
<td>26.5%</td>
<td>15.6%</td>
</tr>
<tr>
<td>다소 나빠짐</td>
<td>16.3%</td>
<td>26.9%</td>
<td>11.8%</td>
<td>12.5%</td>
</tr>
<tr>
<td>매우 나빠짐</td>
<td>3.3%</td>
<td>0.0%</td>
<td>8.8%</td>
<td>0.0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

- ‘좋아질 것’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‘북한 내부의 필요성’과 ‘우리정부의 대북정책’에, ‘나빠질 것’의 경우에는 ‘대북제재 반발’을 주요 이유로 응답
  ∙ ‘좋아질 것’ : 북한 내부의 필요성(44.2%)과 ‘우리정부의 대북정책’(42.3%)
  ∙ ‘나빠질 것’ : 미주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반발(43.8%), ‘북한의 대남위협’ (31.3%) 등을 가장 큰 악화 이유로 응답

<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>  <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 >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좋아질 것</th>
<th>나빠질 것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주변국의 노력과 압박</td>
<td>3.8%</td>
<td>0.6%</td>
</tr>
<tr>
<td>우리정부의 대북정책</td>
<td>42.3%</td>
<td>44.2%</td>
</tr>
<tr>
<td>북한 내부의 필요성</td>
<td>61.5%</td>
<td>27.2%</td>
</tr>
<tr>
<td>기타</td>
<td>3.1%</td>
<td>5.9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
②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

○ (북한 핵·미사일 해법)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

- 전문가의 59.8%가 북한 핵·미사일 해법에 대화·제재 병행 방식을 강조
  ∙ “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에 대한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‘대화·제재 병행’이 59.8%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‘대화로 해결’(27.2%), ‘대북제재 강화’(13.0%) 순으로 응답
  ∙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‘대북제재 강화’(34.6%)에, 진보는 ‘대화로 해결’(46.9%)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

< 북한 핵·미사일 해법 >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대화·제재 병행</td>
<td>59.8%</td>
<td>61.5%</td>
<td>67.6%</td>
<td>50.0%</td>
</tr>
<tr>
<td>대화로 해결</td>
<td>27.2%</td>
<td>3.8%</td>
<td>26.5%</td>
<td>46.9%</td>
</tr>
<tr>
<td>대북제재 강화</td>
<td>13.0%</td>
<td>34.6%</td>
<td>5.9%</td>
<td>3.1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○ (북한의 도발 가능성)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 했고, 다음으로 사이버공격, 7차 핵실험, 국지도발 순으로 응답

- “최근 남북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다음 각각의 가능성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”라는 질문에
  · 7차 핵실험: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의 과반 이상인 57.6%는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,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42.4%임
  · 장거리 미사일 발사: 전문가의 다수인 81.5%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  · 국지도발: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의 상당수인 76.1%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
  · 사이버 공격: 전문가의 67.4%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
- 정치성향별로는, 7차 핵실험에 대해 보수가 진보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, 장거리미사일은 보수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
< 북한의 도발 가능성 >
3 남북관계 주요 현안

○ (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) 대부분 찬성의 의견이 많았으나, 5.24 조치 해제,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는 성향별 차이가 뚜렷함

- “다음은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들입니다.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
  · 5.24조치 해제 : 찬성(59.8%)→반대(23.9%)→보통(16.3%) 순으로 응답
  · 개성공단 재가동 : 찬성(59.8%)→반대(27.2%)→보통(13.0%) 순으로 응답
  · 금강산관광 재개 : 찬성(62.0%)→반대(27.2%)→보통(10.8%) 순으로 응답
  · 6자회담 재개 : 찬성(76.1%)→보통(14.1%)→반대(9.8%) 순으로 응답

  ![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_전체]

-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찬성 의견이었으나, 5.24 조치 해제,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는 정치성향별 차이가 분명
  · 5.24조치 해제 : 진보와 중도는 각각 71.9%, 73.5%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찬성 의견이었으나, 보수는 42.3%가 반대 의견을 내비침
  · 개성공단 재가동, 금강산관광 재개 : 진보와 중도는 70~80% 수준으로 찬성의 의견이었으나, 보수는 각 사안에 대해 50%가 반대의 의견
  · 6자회담 재개 : 모든 정치성향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찬성의 의견

▲ 현대경제연구원
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문제? 설문조사

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_정치성향별

○ (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)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, 조속한 재개노력이 필요

- 전문가의 상당수인 67.4%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고려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
  - “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67.4%가 ‘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’에 응답
  - 다음과 ‘북한이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 없다’(17.4%), ‘남북관계 상황을 뒤가면서 재개’(15.2%) 수준으로 응답

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

<table>
<thead>
<tr>
<th>필요성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고령의 이산가족 고려, 정치적 상황 무관하게 재개노력 필요</td>
<td>67.4%</td>
<td>50.0%</td>
<td>73.5%</td>
<td>75.0%</td>
</tr>
<tr>
<td>북한 반대 시,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 없음</td>
<td>17.4%</td>
<td>30.8%</td>
<td>11.8%</td>
<td>12.5%</td>
</tr>
<tr>
<td>남북관계 상황을 뒤가면서 재개</td>
<td>15.2%</td>
<td>19.2%</td>
<td>14.7%</td>
<td>12.5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대북정책 평가

1. (대북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75.0%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

- 전체 92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다수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한다고 응답
  - ‘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’라는 질문에, 전문가들의 다수인 75.0%( 아주 잘한다 12.0%+잘하는 편이다 63.0%)가 ‘잘한다’고 평가
  - 정치성향별로는, 보수가 ‘잘한다’와 ‘잘못한다’의 비중이 각각 50.0%로 응답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아주 잘한다</td>
<td>12.0%</td>
<td>11.5%</td>
<td>11.8%</td>
<td>12.5%</td>
</tr>
<tr>
<td>잘하는 편이다</td>
<td>63.0%</td>
<td>38.5%</td>
<td>67.7%</td>
<td>78.1%</td>
</tr>
<tr>
<td>잘못하는 편이다</td>
<td>19.6%</td>
<td>34.6%</td>
<td>17.6%</td>
<td>9.4%</td>
</tr>
<tr>
<td>아주 잘못한다</td>
<td>5.4%</td>
<td>15.4%</td>
<td>2.9%</td>
<td>0.0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2. (신북방정책 평가) 전문가들의 64.1%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

- 전문가의 과반 이상은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
  - ‘정부는 한반도 평화양상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습니다. 신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’라는 질문에, 전문가들의 64.1%(크게 기여 7.6%+다소 기여 56.5%)가 ‘기여할 것’이라고 평가
  -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나 중도에 비해 보수가 비판적으로 응답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크게 기여할 것</td>
<td>7.6%</td>
<td>7.7%</td>
<td>5.9%</td>
<td>9.4%</td>
</tr>
<tr>
<td>다소 기여할 것</td>
<td>56.5%</td>
<td>38.5%</td>
<td>61.8%</td>
<td>65.6%</td>
</tr>
<tr>
<td>별로 기여 못할 것</td>
<td>33.7%</td>
<td>50.0%</td>
<td>32.3%</td>
<td>21.9%</td>
</tr>
<tr>
<td>매우 기여 못할 것</td>
<td>2.2%</td>
<td>3.8%</td>
<td>0.0%</td>
<td>3.1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○ (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)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내 필요하다는 입장

-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.8%(매우필요 55.5+다소필요 29.3%)에 달함
  
  · “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다수인 84.8%가 필요하다고 응답
  
  · 정치성향별로는, 진보(96.9%), 중도(88.3%), 보수(65.4%) 순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매우필요</td>
<td>55.5%</td>
<td>30.8%</td>
<td>58.9%</td>
<td>71.9%</td>
</tr>
<tr>
<td>다소필요</td>
<td>29.3%</td>
<td>34.6%</td>
<td>29.4%</td>
<td>25.0%</td>
</tr>
<tr>
<td>별로필요없다</td>
<td>10.9%</td>
<td>26.9%</td>
<td>8.8%</td>
<td>0.0%</td>
</tr>
<tr>
<td>전혀필요없다</td>
<td>4.3%</td>
<td>7.7%</td>
<td>2.9%</td>
<td>3.1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○ (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)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

-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78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대 다수인 93.6%(임기 초반 46.2+ 임기 3년 내 47.4%)가 임기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
  
  ·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에 한해 “남북정상회담을 언제쯤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‘임기 3년 내’(47.4%), ‘임기 초반’(46.2%), ‘임기 말’(26.2%) 순으로 응답
  
  · 기타 의견으로는 ‘주변국 동의를 통해 분위기 조성 후’, ‘재임기간 중 어느 때라도’, ‘최대한 빨리’ 등으로 응답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임기초반</td>
<td>46.2%</td>
<td>17.6%</td>
<td>46.7%</td>
<td>61.3%</td>
</tr>
<tr>
<td>임기 3년 내</td>
<td>47.4%</td>
<td>70.6%</td>
<td>46.7%</td>
<td>35.5%</td>
</tr>
<tr>
<td>임기말</td>
<td>2.6%</td>
<td>5.9%</td>
<td>3.3%</td>
<td>0.0%</td>
</tr>
<tr>
<td>기타</td>
<td>3.8%</td>
<td>5.9%</td>
<td>3.3%</td>
<td>3.2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

⑤ 북한의 대외관계

○ (북미 정상회담 가능성) 전문가의 52.2%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
- “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전문가의 절반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

<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>

<table>
<thead>
<tr>
<th></th>
<th>전체</th>
<th>보수</th>
<th>중도</th>
<th>진보</th>
</tr>
</thead>
<tbody>
<tr>
<td>매우 가능성 높음</td>
<td>2.2%</td>
<td>3.8%</td>
<td>0.0%</td>
<td>3.1%</td>
</tr>
<tr>
<td>가능성 있음</td>
<td>50.0%</td>
<td>34.6%</td>
<td>58.8%</td>
<td>53.2%</td>
</tr>
<tr>
<td>가능성 없음</td>
<td>40.2%</td>
<td>46.2%</td>
<td>35.3%</td>
<td>40.6%</td>
</tr>
<tr>
<td>매우 가능성 없음</td>
<td>7.6%</td>
<td>15.4%</td>
<td>5.9%</td>
<td>3.1%</td>
</tr>
</tbody>
</table>

○ (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) 전문가의 절반 수준이 북미, 북중관계 모두 현상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“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?”라는 질문에, 보수의 의견이 다른 성향에 비해 비관적으로 응답

<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 전망 >

이해정 연구위원 (2072-6226, hjlee@hri.co.kr)
이용화 연구위원 (2072-6222, yhlee@hri.co.kr)